

한은 '깜짝' 금리 인하 1.25%로

0.25%p 낮춰... "경기 부양에 긍정적" - "대외리스크 판단 뒤 낮췄어야" 평가 엇갈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긍정 평가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한편에선 대외리스크를 고려한 후 내렸어야 하는데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50%였던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0%로 인하한 뒤 올해 5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해 왔다.

이번 결정은 예상밖의 '깜짝 인하'라는 평가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79.4%가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슈는 물론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투표(브렉시트)를 앞두고 있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았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인하 시점을 고민하던 한은이 선제적 대응했다"며 "구조조정 등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음악전문 서비스 '지니 VR' 출시 KT유직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국내 최초 음악전문 VR서비스(지니 VR)를 선보이고 있다. KT유직이 선보이는 지니 VR 서비스는 KT그룹의 'GIGA V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각종 공연 및 쇼케이스 VR은 물론 '스타의 녹음실' '스타와 함께 여행 떠나기' 등 프리미엄 VR 콘텐츠를 연내 100편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위축 우려를 어느정도 보완한 선제적인 금리 전락"이라며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외 리스크를 판단한 뒤 인하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낮아

지면서 기준금리를 유지했어야 했다"며 "미국의 지표는 물론이고 일본의 제로금리 등 사례를 연구한 뒤 단행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대외에 불확실한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보수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살아날 순 있겠지만 수출과 생산의 문제로 침체된 경

기가 금리 내렸다고 얼마나 부양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광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며 자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상황을 보면 집값 상승,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버블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진수 기자

국내외 호텔 12% 할인 예약 행사

마스터카드, 익스피디아 사이트에서 30일까지

마스터카드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이트 익스피디아와 함께 올 여름 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국내외 호텔 12%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스터카드 고객은 익스피디아의 마스터카드 고객 전용 쿠폰 다운로드 사이트(www.expedia.co.kr/mastercard)에 접속해 카드 번호 앞 6자리와 영문명,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12% 예약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은 오는 6월30일까지 1인당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호텔 예약은 8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실제 투숙은 체크인일차 기준으로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마스터카드 사업개발 담당 서명희 차장은 "자유 여행 고객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외 자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정부, 상한액 '출고가 이하'로 변경 단통법 개선안 논의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만~35만원 내에서 정한다. 상한액은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조항으로 다음해 10월 자동폐기되는 만큼 상한을 변경해 사실상 조기폐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 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수 기자

'연비도 눈속임' 폭스바겐 파장 일파만파

검찰, 배출가스 조작이 26종 연비시험성적서 48건도 조작 확인

폭스바겐이 '연비 조작'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2년 동안 연비시험 성적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판매 등 경영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비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 8일 아우디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

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일 본사에서 보낸 연비시험 성적서를 유효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 처럼 날짜를 꾸미고, 특정 차종에 대한 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다른 차종의 데이터를 공단에 제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작된 연비 성적서로 신고한 차량은 골프 2.0 TDI 등 모두 26종이다.

검찰은 한국 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국내 시장에 차량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검사 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과 미국 사법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서 연비 조작 파문까지 겹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폭스바겐은 2316대를 판매해 전 달(784대)보다 3배 증가했다. 판매량이 한 달 만에 2000대 선으로 회복한 것이다. 가장 많이 팔린 차종도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이었다.

올해 정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잇따라 퇴짜를 맞는 등 불성실한 후속 조치에도 판매량이 견고한 모습이었으나 연비 조작 파문까지 겹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비는 배기가스와는 별개 문제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때 중요한 구매 기준 중 하나

라며 "연비를 내세운 디젤차가 주력인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소비자들도 불성실한 후속 조치에 이어 연비 조작까지 터지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세 번째 반려하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은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환경부에는 리콜 대신 환불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연비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연비 조작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더민주 "가계부채대책 재탕·삼탕 안돼"

임종룡 "일관된 대응" 응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향해 재탕·삼탕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태도로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더민주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회의를 열고 임 위원장을 향해 "가계부채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한달만 해도 가계대출이 6조7,000억원 증가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아주 심각한 현실을 금융위원장도 잘 알 것"이

라며 "취임할 때 가계부채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도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더이상 임기응변 식으로 타성에 젖어 재탕·삼탕 정부정책을 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TF를 통해 더민주의 생각과 정책을 수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제 여건, 금융시스템 안정성, 주택, 서민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밀하고 균형감 있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위험요인이 안되도록 하면서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으로 일관된 대응방안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